

목 차

■ 참여정부 안보 정책 현안과 방향

Executive Summary 1

I.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 2

II. 남북 관계 현안 4

III. 한미 동맹 및 국방 개혁 6

< 토론 > 8

■ HRI 경제 지표 24

참여정부 안보 정책 현안과 방향

□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

- **북핵 문제** : 2.13 합의로 핵 폐기 과정이 실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2.13 합의 이행은 현재 BDA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임
- **6자회담 전망** : 2.13 합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일련의 합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이 없는 한 상응 혜택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북한도 2.13 합의를 쉽게 저버릴 수는 없을 것임
·정부는 6자 외교 장관 회담 개최, 직접 당사자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 방안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남북 관계 현안

- **남북 대화 진행 현황** :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적십자회담에 이어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정치, 경제, 인도, 군사 분야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
·남북 관계는 이러한 당국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정상화, 제도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 1단계 잔여부지 53만 평에 대한 분양 공고, 한미 FTA 협상 타결,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개성공단사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 단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북한에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이며,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일구어 나가는 평화 사업임
- **남북 대화 채널의 활용** :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지향하면서 6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해왔음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남북간 현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북측에 2.13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 남북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것임

□ 한미 동맹 및 국방 개혁

- **한미 동맹 현안** : 지난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맹 재조정 현안의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음
·정부는 한미 공동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 수립을 준비해 나갈 것임
- **국방 개혁 추진 현황**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운영 혁신 등 국방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참여정부 안보 정책 현안과 방향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7년 5월 11일
- 연사 :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I.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

2.13 합의 이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진전 문제와 그 배경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한미 관계 국방 관련 문제들이 거의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 계도에 올라섰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겸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 2.13 합의로 핵 폐기 과정이 실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3 합의 이행은 현재 BDA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관련된 행위자들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직접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BDA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13 합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일련의 합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이 없는 한 상응 혜택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북측도 2.13 합의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DA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의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방북 초청, 영변 핵 시설 폐쇄, 그리고 중유 5만 톤 지원, 6자회담 재개 등 초기 단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정부는 초기 단계 조치 이행과 함께 북한 핵의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한 핵 시설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저희 희망대로 된다면 6자 외교 장관급 회담, 직접 당사자간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논의, 워킹 그룹에서 이미 시작한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 방안 협의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II. 남북 관계 현안

다음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20차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인도적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관계는 나름대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남북 대화 진행 현황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제13차 회의가 평양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는데 그때 앞으로의 경협 추진 일정도 마련했고, 또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 8차 적십자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분야에서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제 5차 장성급 회담이 5월 8일에서 11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5월 17일 철도 시험 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실무에서는 조금 커버가 덜 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철도 운행에 관련해서 매년 일일 단위로 군사 보장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을 이번으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5월 17일 이번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항구적 군사 보장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런 문제를 이왕이면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보자는 식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급 회담과 경추위, 적십자 회담에 이어서 장성급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정치, 경제, 인도, 군사 분야의 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러한 당국 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또 정상화, 제도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1단계 잔여 부지 53만평에 대한 분양 공고가 이미 나왔고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개성공단이 포함된 소위 북측 지역의 역외 가공 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4월 27일) 되면서 상당히 발전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본격 개발은 무엇보다도 국내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북 간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화 프로젝트로 정부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현재 14,000여 명의 남북 근로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이고 또 과거의 긴장의 중심지였던 곳이 앞으로는 남북간의 평화 공존의 지역으로 변하는 평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남북 대화 채널의 활용

또 현재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정부는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서 남북간 현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북측에 사실 2.13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Ⅲ. 한미 동맹 및 국방 개혁

■ 한미 동맹 현안

지난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참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한미 공동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기지 이전 문제인데 정부는 지난 17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용산 기지를 포함해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위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을 작성하여 지난 3월(3.20)에 발표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4월에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사업 관리 업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5월 중에는 사업관리 업체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기지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국방 개혁 추진 현황

다음은 국방 개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3월 27일에 발효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운영 혁신 등 국방 개혁을 매월 점검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이 목표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병력 위주의 양적 군대에서 군사 전력 구조를 첨단 기술에 기초하고 새로운 형태의 질적 군대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의 진행과 더불어서 첨단 전력을 갖춘 질적 군대로의 변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21세기 정예 강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병영문화개선과 더불어 병역 제도 개선을 추진 해 왔습니다. 지난 번 병역 개선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바로 그것이 2년 먼저 직장을 얻어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전략,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국가발전과 개인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군대 문제를 들여다보고 군의 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병역 제도도 가능하면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병사들의 근무 연한을 18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2013년 1월이 되면 모든 병사들이 18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 것이 골격입니다. 이런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문제이지만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박영규 국제디지털대학 부총장) 오늘 토론의 말문을 연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BDA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BDA 문제만을 놓고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2.13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3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초기 단계 이행 조치가 오히려 이행하기 쉬운 단계이고 갈수록 점점 더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텐데 북한의 협상 전략이 이 BDA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동결 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는 동결 해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환 거래까지 보장하라고 추가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 북한이 보여 온 협상 행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BDA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상 전략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DA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중개 역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중개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수출입은행의 신인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국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검은 돈을 세탁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미국이 안 해 줄 경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이행되어서 핵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그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좀 더 조심을 해야 하고 또 우리의 별도 대응책을 개발 수립해야 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으면서 보상은 보상대로만 받으려는 시나리오도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BDA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현재 상황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행정부 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국제적인 제재 조치까지 받아가면서도 체제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과연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라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상만을 받으려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협상 입지가 변화된 배경 중에는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 보고도 실패할 경우는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간다는 대북 입장을 표명한 것, 그리고 아울러서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대북 지원도 없다는 약속이 미국 내에 협상과의 입지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 태도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느 수준까지의 외교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시간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지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한다’에 대한 의미와 ‘미국과 같이 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같이 간다는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견 질문 겸 코멘트인데 북한이 연초부터 남한의 대선을 겨냥해 가지고 대남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평통 서기국 보도 1월 5일자에서도 나와 있고, 2월 5일자 한나라당 비난 비방록에 발표한 데서도 나타나 있고 그런가 하면 3월 27일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이 마침 대선의 해가 되어서 물론 남북 관계라는 게 정치를 완전히 떠나서 진행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 또 6자회담, 핵문제가 우리 대선 정치에 과잉 오염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선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김혁규, 손학규 세 분이 벌써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6월 남북 정상 회담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질문은 대선 예비 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평양 순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평양 순례가 청와대의 코디네이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독자 행동인지,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 대통령 비공식 특사설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영규 부총장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는데,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만 나갈 수 없지 않느냐, 내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한미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에 참석한 몇 사람이 포럼과는 상관없이 어떤 제의를 해 왔느냐 하면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미간 7~8명이 모여서 시간제한 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자는 제안이 나와서 그게 성사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이건 브루킹스 주변의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핵 완전 폐기,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청와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의 첫 번째 질문과 관계가 되고 역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 노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이번 철도 연결 문제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월 17일의 철도 개통 문제와 FTA 가공 문제가 어느 정도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보니까 FTA도 물론 잘 모르지만 역외 가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이 인증 받았다 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에 따라서 그건 인정받고 못 받는 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의 현장이나 남북 경협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면 역외 가공도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될 텐데 미국사람들이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를 다르게 볼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공 문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북한의 군사 문제가 연결이 되면 이분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철도 연결 할 때 국내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에 대한 홍보, 그래서 우리가 FTA 역외 가공을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문제에서도 이번에 버지니아텍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시다만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게 굉장히 찾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언론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5월 17일 철도 연결이나 그런 건 상당히 먹힐 수 있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철도 잇는 차원이 아니라 철도의 연결에 옛날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 라는 스토리를 잘 엮어 가지고 잘 브랜딩해서 해외에 홍보하면 나중에 FTA 역외 가공 무역 이것이 개성공단 문제까지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앞에서 두 분 질문하고 토론한 것과 연결시켜서 하나 말씀드리면 핵실험을 하기 이전의 남북 관계와 핵실험 이후의 남북 관계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 방향을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 문

제가 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경협이나 사회 문화나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엇그제 박진 의원이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핵 정책이 변하는 게 아니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에서 CVIM(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Manag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 핵 폐기는 구호성에 불구하고 핵불능화 조치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의 북핵 문제 해결로 보는 것 아니냐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 혹은 그런 가정하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미 국무부의 실무자들이나 그 쪽 사람들과 얘기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같은 방문단 일원이었던 황진화 의원은 똑같은 사람을 면담하고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갈 때 우리 정부의 핵 정책이 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불투명하게 오락가락하면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혼선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서 정책적으로 좀 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제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왕설래가 있는데 핵 불능화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2.13 합의할 때 뭔가 6자간에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한미일 간에 양해가 된 게 있는지,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불능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희 대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 문제입니다. 금년 초에 이해찬 총리가 평양에 가면서 대선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과 DJ 측간의 미묘한 긴장관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DJ를 특사로 활용하려는 정책도 폄하였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 관계가 6자회담, 북핵 문제보다 반 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 보 선행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반보 나중, 북핵 문제의 진전에 맞게 정상회담은 반보 나중이라고 했는데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이나 우리 자주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 보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8월설을 장영달 의원도 엇그저께 언론에 비치고 그랬는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다 아시는 대로 박영규 부총장님이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 BDA 문제가 그냥 관심사항이 아니라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걸 저희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DA가 근본적인 문제냐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냐와 관련해서 저는 BDA 문제가 안 풀리면 다른 것도 다 안 되고 풀리면 다른 것도 다 된다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BDA가 풀려야만 다른 일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BDA 문제는 2.13 합의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측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쇄, IAEA 사찰단을 초청하여 봉인 감시, 그리고 다음으로 전반적인 핵 시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 국가는 1차 초기단계로 60일 이내에 중유 5만 톤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것은 2.13 합의의 틀 밖에서 30일 이내로 BDA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BDA에 있는 자금 전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한한테 BDA에 있는 북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은행한테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셨겠지만 북측은 당연히 미국이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돈을 옮기는 과정이 기술적으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북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돈에 대해 제3국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사실 미국은 BDA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신용문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것을 걱정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문에도 한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여 BDA 문제를 풀어 북쪽한테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주자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항시 BDA 문제만 풀리면 자기들은 즉각적으로 IAEA 사찰단을 초청하고 초기 단계를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북측의 초기 사항 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전에 BDA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그 문제에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BDA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 역시 금융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 정도 되면 북한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BDA 문제만 해결 되면 자기들은 초기 단계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서너 번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은 이번의 북한 의도는 진정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를 하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시중은행 등 모든 은행들은 조금이라도 문제나 실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엄청나게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미국의 은행은 우리보다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여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정부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검토 단계에서 끝났고, 지금은 직접 당사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북한과 우리가 협상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남북 간에 그렇게 협상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다른 군사적인 측면, 남북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상 문제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능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논의나 얘기는 분명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부총장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가정 하느냐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북한의 핵 불능,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정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성호 교수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분명히 9.19 선언에는 핵을 포함한 전반적인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핵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 회담 때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핵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핵이 있다면 핵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 스탠스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외교적 협상 이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핵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북한 핵이 있다면 전반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는 저희들의 확실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협상을 해야 하는 건 저희들이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가정은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핵이 199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2.13 합의 이후 지금 석 달 됐는데 석 달 동안에 우리가 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로써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핵 있는 북한을 가정하는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나 학자님들께서는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 왔지만 그런 가정된 삶을 생각하면서 연구하시고 논의하는 건 북쪽의 핵 폐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미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있어서 누가 앞이고 누가 뒤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 번 경추위 협상 때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했던 건 그때 공동 선언문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신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은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푸는 절차로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BDA 문제가 풀리고 초기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 대한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분명히 최소한도 자기들이 핵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IAEA 사찰단을 초청해 봉인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만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초기 단계를 북한이 이행한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대북 쌀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대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부와 열린 우리당 쪽 국회의원들과는 사전 합의나 그분들과 교감이 되어서 한 것

은 분명히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반복하는 문제라 정부는 사후 보고만이라도 성실히 해 달라는 입장이지,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 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때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액션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현재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성호 박사님께서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정책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가정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핵실험 전과 후의 큰 변화라고 하면 핵실험을 했으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핵실험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북한 핵 불능 정책인데 핵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크게 단순화하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평화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의 틀이 이미 존재하고, 또 남북 간의 축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간과 인내와 노력과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진척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 이후에 전략이 달라진다고 하면 결국 압박, 군사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남북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6~7개월 단절 될 때도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우발 사태 없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 답이 된 것 같지요? 모든 핵시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영변

이후의 불능화 단계가 되면 전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한번 분명히 보시고 잘못되면 비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진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임동원 이사님과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고 그 다음이 4자 회담이라는 논리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관찰과 지식과 선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환 중앙일보 기자) 실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일단 한 가지는 BDA 사태가 진전되거나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성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BDA 문제가 2.13 합의의 다른 트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3 트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틀과 북미 관계의 틀이 있는데 결국은 6자회담 틀이 북미 관계의 틀 안에서 종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결정 시간표라든가 2.13 합의의 이행에 대한 문제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 BDA가 해결이 되어서 2.13 초기 이행 조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불능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북미 관계에서 핵심 현안들,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등이 6자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서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걸 제어하는 시간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불능화든 초기 이행 조치든 우리가 내놓고 있는 보상책은 중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BDA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이 2.13 초기 이행 조치에 보상 체계의 하나인 5만 톤 중유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급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 중 하나가 남한에서 들어가는 5만 톤에 상회하는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5만 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2.13 조치의 보상책과 관련해서 남북 트랙과 비핵화 트랙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될 때 비핵화 트랙이 담보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선 순환되어야 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BDA 문제 논의차 천영우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을 방문 하셨는데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년-루가 프로그램’을 상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BDA 해결 이후에 어떤 새로운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6자회담 틀에서는 2.13 합의 조치 이후 이행 방향이 BDA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동력이 상당부분 소진되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행방안이라든가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집트에서 라이스 장관과 송민순 장관께서 만나셨는데 BDA 이후 동력이 상당히 소진하고 모멘텀이 없는 이 2.13 합의 틀을 불붙일 수 있거나 추동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논의한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최근 일본이 미국에 최첨단 비행기인 F-22 도입 의사를 표명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동북아에 중국과 일본간의 군비 경쟁 등 군사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F-15K 슬램 이글 차세대 전투기 40대를 구매 중에 있고 추가로 20대를 1차 제안을 했는데 유럽 기종들이 참여를 안 해서 F-15K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일본의 F-22 도입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22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에 판매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만약 일본이 F-22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F-15K 20대 구매를 연기하고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하기에 군사 협력 체제라든가 미래의 한미 관계도 구상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정치적인 부문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경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핵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북한 경제는 우리 경제의 3% 밖에 안 됩니다. 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북한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2% 대 밖에 안 됩니다. 결국 98대 2 밖에 안 되는 데 너무 북한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모시 조끼를 처음으로 북한에 수출한 이래 북한과 교역한 지가 19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19년 동안에 우리 교역 업체나 임가공 업체가 북한에 기술도 지도해 주고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나오면 북한 경제 문제는 전부 개성공단과 금강산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실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으로 따지면 개성공단이 연간 700만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이 1,300만 달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에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북한의 물자를 사오는 것만 해도 1억 4천만 달러가 됩니다. 또 임가공 업체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게 2천만 달러가 넘고 또 중국 경제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북한 경제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19년 전부터 시작된 이 교역 업체나 임가공 업체,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것인데 어디를 봐도 정부 측의 발표를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관계 지원국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지 대북 교역에 중심이 되고 있는 북한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55억 달러가 넘는, 말하자면 대북 협력 기금이 쓰였는데 대북 교역 업체 그 동안에 100여개 이상 쓰러졌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비율은 0.2% 밖에 안 됩니다. 개성공단을 제

외하면, 1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억 원 미만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항상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해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35,000명 이상 노동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평양에서 북한 경제 일꾼들을 변화시키고 남쪽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동안에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더 많은 역할을 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현 정부 기간 동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임가공 업체의 기술자들이 그 동안에 7만 명 정도 평양과 남포 인근에 기술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중에 35,000명이 우리 남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1995년도에 남포 공단 만들어서 경협 단지 만들고 그 후에 북한과 교역한 업체들이 5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리고 괜찮게 하는 업체 중에 만약에 금융 지원이 안 되어서 쓰러진 회사들만 해도 1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도 대체 저희 언론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이걸 몇 차례 얘기 해 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재정 장관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라를 이끄시는 앞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역시 남북 문제를 하다 보면 현안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개성공단 이외의 다른 대북 경제 진출 현황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BDA 문제가 2.13 프레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북미 관계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BDA 문제가 안 풀리고 안 되니까 이쪽이 종속이지 않느냐,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북한이 계속 추구해 왔던 게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현재도 그런 성향이 여전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체제보장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자기들이 부딪히고 있는 국제 금융 질서에서의 문제, 그리고 테러 지원 문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문제 등이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미국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느낄 것 같아서 걱정일 정도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까? 이걸 사실인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6자회담 속으로 들어와서 다자 쪽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이 미국도 동의했던 것이 워킹 그룹입니다. 이미 5개의 워킹 그룹이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축이 북미 워킹 그룹 아닙니까? 그 북미 워킹 그룹이 다른 건데 저희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6자회담에 들어온 것까지는 모든 분들이 협의하고 저도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워킹 그룹 내에서 각자 진전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북미 워킹 그룹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재 생각은 워킹 그룹에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워킹 그룹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항시 전체 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시 그 문제들을 전부 섞어서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엮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딱 짤 수는 없지만, 분명히 워킹 그룹과 전체 회의를 아주 잘 전략적으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도록,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진행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길정우 중앙 M&B 대표이사)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에 현대 경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경협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좋은 말씀해 주신 백종천 실장님,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487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P) | 2006(E) | 2007(E) |
| 국 민 계 정 | 경제성장률 (%) | 3.8 | 7.0 | 3.1 | 4.7 | 4.2 | 5.0 | 4.2 |
| | 최종소비지출 (%) | 4.9 | 7.6 | -0.3 | 0.4 | 3.9 | 4.5 | 3.7 |
| | 민간소비 (%) | 4.9 | 7.9 | -1.2 | -0.3 | 3.6 | 4.2 | 3.5 |
| | 총고정자본형성 (%) | -0.2 | 6.6 | 4.0 | 2.1 | 2.4 | 3.2 | 2.5 |
| | 건설투자 (%) | 6.0 | 5.3 | 7.9 | 1.1 | -0.2 | -0.4 | 1.5 |
| | 설비투자 (%) | -9.0 | 7.5 | -1.2 | 3.8 | 5.7 | 7.6 | 4.5 |
| 대 외 거 래 기 준 | 경상수지 (억 \$) | 80 | 54 | 119 | 282 | 166 | 61 | -30 |
| | 무역수지 (억 \$) | 93 | 103 | 150 | 294 | 232 | 161 | 100 |
| | 수출 (억 \$) | 1,504 | 1,625 | 1,938 | 2,538 | 2,844 | 3,250 | 3,560 |
| | 증가율 (%) | (-12.7) | (8.0) | (19.3) | (31.0) | (12.0) | (14.4) | (9.5) |
| | 수입 (억 \$) | 1,411 | 1,521 | 1,788 | 2,245 | 2,612 | 3,094 | 3,460 |
| | 증가율 (%) | (-12.1) | (7.8) | (17.6) | (25.5) | (16.4) | (18.4) | (11.8) |
| 기 타 | 소비자물가 (평균, %) | 4.1 | 2.7 | 3.6 | 3.6 | 2.8 | 2.2 | 2.8 |
| | 실업률 (%) | 3.8 | 3.1 | 3.4 | 3.7 | 3.7 | 3.5 | 3.7 |
| 금 융 | 원/\$ 환율 (평균, 원) | 1,291 | 1,253 | 1,192 | 1,145 | 1,024 | 955 | 925 |
| | 국고채금리 (평균, %) | 5.7 | 5.8 | 4.6 | 4.1 | 4.3 | 4.8 | 4.4 |